

부동산 법안 등 4개 법안 직권상정

# 국회 몸싸움 활극 재연 되나

## 한나라 "의장실 점거 불사"... 충돌 불가피 與 "시급한 4개 법안만 선택... 통과 자신"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발이완수 제 등 3·30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3개 및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의 여야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직권 상정을 요청한 16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만 직권 상정될 예정이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국회의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한 국회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발이완수 제 등 3·30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3개 및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의 여야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직권 상정을 요청한 16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만 직권 상정될 예정이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국회의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한 국회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 "직권상정 물리적 동원 저지"=한나라당은 4개 법안에 대해 직권 상정을 결정하자 충격과 함께 격양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처 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4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민노당이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원기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글로벌비스 비자금 MK에 전달”

이주는 사장 법정 진출... 검찰, 정회장 소환 용처 수사

현대차그룹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정기적으로 정몽구 회장에 전달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정 회장이 비자금을 회사 관련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추측케 하는 정황으로 보여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주는 글로벌비스 사장은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비자금을 정 회장 비서실장과 자택 운전기사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글로벌비스 재경팀장의 진술이나 증거수첩 등을 보면 피고인이 비자금에서 매달 1천800만원, 두 달에 한번 800만원씩 한남동 자택 운전기사에게 줬다는데 그런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비자금이 특별히 없다고 했는데 그럼 정 회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 돈 일부를 갖고 회장으로 가져갔는가”라고 묻자 “금고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 모르다”면서도 “(비자금이) 글로벌비스 자체 돈인지 외부 돈인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갖다준 돈은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일부를 김승년(전 비서실장)씨에게 준 것을 제외

하면 그 외에는 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비자금에서 매달 1천만원씩 빼서 임원들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했고, 그 중 매주 50만원을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줬다는데 그런 어떤 것인가”라고 묻자 “관공비로 예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사장은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15일 오후 2시에 속행공판을 열고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첫 공판을 마쳤다. 이씨는 정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0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90여회에 걸쳐 글로벌비스를 통해 비자금 71여억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1일 오전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회장을 소환해 로비 의혹 등 비자금 용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을 오늘 처음으로 소환해 정황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물론 1천 200여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용처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하반기에 글로벌비스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던 비자금 246억원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 돈이 정회장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회장을 추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盧대통령과 거리두기? 레임덕?

당-청 사학법 재개정 갈등... 盧 탈당 맞물려 주목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DJ)대통령과 야박하게 차별화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풍’(盧風)의 위력으로 여당 후보가 된 노 대통령이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시험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여당의 최대 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비리의 흑이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야박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DJ의 계승 발전자’임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영남 출신 후보였던 그로서는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인 호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 4

년이 흐른 뒤 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정동영 의장이나, 김근태 최고위원은 물론,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도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 “사학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의견을 통일했다. 내년 대선을 1년 반 가량 남겨 놓은 시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전략적 차별화’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은 20% 낮았다. 한나라당과는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거의 더블스코어인 셈이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더욱 벌어져 있다. 지지를 격차의 요인으로 여당내에서는 ‘현 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반성하고 노력해도 ‘미운털’이 박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조하다. 기존 여론구도의 관을 깨지 않고는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착된 틀을 깨려면 자기과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학법 양보’ 카드를 거부하면서 여당과 현직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게 전략적 거리두기 해석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당쪽의 전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경호권까지 발동해 통과시켰던 여당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사학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여당내의 반발을 뺀히 예상하면서도 재개정을 주문한 것은 ‘탈당’까지도 각오한 향후 정국 운영 카드의 일단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간 참여 ‘공공기관운영위’ 만든다

당-정 내달중 법안 마련  
공기업 경영·정비 감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공기업 경영을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변양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용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6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처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특별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해 공기업 재정비에 따른 부처간 갈등과 불만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314개로 확정하고, 이중 94개 기관을 운영체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선대상 94개 기관은 공기업(28개)과 준정부기관(66개)으로 분류되고 총수입, 자산규모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가스공사, 공항공사, 한국전력 등 4개) ▲준시장형 공기업(도공, 토공 등 2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KOTRA, 철도시설공단 등 52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등 14개)으로

나른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 감독체계를 이원화해 공기업의 예산, 조직, 정원,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가 경영 감독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승인, 서비스, 요금 승인, 사업집행 감독은 주무 부처가 전담토록 했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주무 부처가 경영, 사업감독권을 갖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부처 공통의 경영 지침을 제시할 수 있어 포괄적인 경영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 책임 경영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건비, 보수, 정원 등의 경영사항을 통합공시해야 하고 ‘공공기관운영위’는 기관 신설시 타당성 심사권한을 갖는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해오던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도 분리돼 상임이사 임명권은 공공기관장에게, 비상임이사 임명권 및 감사제정권은 ‘공공기관운영위’에게 부여했다.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관련, 모든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의 선임 비상임이사(리드 디렉터) 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이사회 의결권 해임건의권도 신설된다. 당정은 또 임원 임기제도도 개선해 기관장은 3년, 기타 임원(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키로 했으며 임기 중이라도 평가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조치키로 했다. /연합뉴스

GIMMA 2006

# wangju

International Machinery · Mold · Automation Industry Fair

## 광주 국제기계 · 금형 · 자동화산업전

2006. 9. 27 ▶ 30 / 4일간

김대영컨벤션센터

주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금형산업협회, 한국자동화산업협회

주관: 한국기계연구원

주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금형산업협회, 한국자동화산업협회

주관: 한국기계연구원